

국제 비교를 통한 소매업 소상공인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서 용 구*
김 속 경**

한국에서 소매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 비중이 매우 높아 공급과잉 및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 악화 문제가 첨예하게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SSM), 편의점 등 기업형 유통의 확대 등으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인해 부실 위험성이 더욱 커지는 문제까지 직면하고 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의 경영악화 및 그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비자발적 퇴출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의 소매업 자영업 비중은 국제 비교를 통해 보더라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는 OECD 평균과 비교해보거나, 개별 국가 중에서는 유럽 및 미국 등 서방국가에 비해 경제발전 과정 및 문화와 환경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측면이 많은 일본과 비교해 보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또한 산업구조도 매우 영세한 편이다.

우리나라 소매업에서 생계형 자영업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경영 악화 문제는 향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소매업 소상공인 현황 분석 및 국제 비교 분석을 수행하고, 이에 기초하여 자영업의 유입 및 퇴출 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퇴직지원 프로그램 강화, 퇴출의 용이성 제고, 정책 자금 흐름의 재구성 등 세 가지 정책 방안을 제안한다.

주제어: 소매업 소상공인, 공급과잉, OECD 자영업 통계, 창업, 퇴출

I. 서론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임금노동시장에서 퇴출

된 상당수의 퇴직자들이 생계형 창업으로 전환하여 소상공인(또는 자영업)이 과잉상태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소매업이나 외식업 등 특별한 기능이나 숙련 없이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업종의 공급과잉 현상은 더욱 심각

* 제 1저자,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ygs9964@sm.ac.kr)

** 교신저자,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skkm@kiet.re.kr)

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들 업종은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하락으로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한 퇴출이 불가피하게 발생함과 동시에,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신규 창업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시장 기능만으로 원활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임금노동시장의 일자리 증가가 크게 둔화되고, 그 결과 청년실업자 등 임금노동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근로인력이 상당 규모로 존재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하고 이들이 창업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소매업 등 경쟁력이 낮은 업종의 소상공인 공급과잉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개인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소상공인 구조조정을 원만하게 달성하는 것이 현 시기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상공인 과잉공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업종 중 하나인 국내 소매업 소상공인 현황 및 이들이 직면한 경영 상황을 분석하고, 국제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현황을 진단하며, 이에 기초하여 자영업의 유입 및 퇴출 관리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한국의 소매업 소상공인 현황

1. 소매업 소상공인 현황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상공인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해 정의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도·소매업을 포함한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의 사업자를 의미한다.

한편 소상공인 정책은 상당부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자영업은 소상공인 처럼 법규에서 명확히 정의되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이 사업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사업체, 즉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체에 대비되는 개인사업체를 지칭하는 개념이며, 자영업자는 자영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은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소상공인의 대부분은 자영업에 해당하며 역으로 자영업의 대부분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등 양자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의 제약상 소상공인과 자영업 통계를 함께 사용한다.

중소기업청은 법에 정의된 소상공인 개념에 부합한 통계를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의 재편·가공을 통해 생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0년의 경우 전체 사업체 수는 313만개인 데, 이중 소상공인은 275만개로서 전체 사업체의 87.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체 기업의 종사자 수는 1,414만명인데, 이중 소상공인의 종사자 수는 533만명으로서 전체 종사자의 37.7%를 차지하고 있다(<표 1> 참조).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대분류 기준으로 업종별 소상공인 현황을 보면,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모두에서 도·소매업에 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표 1>에 나타나듯이, 도·소매업의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79만개로 전 산업 소상공인 사업체 수의 28.6%를

〈표 1〉 도·소매업 소상공인 현황(2010년)

(단위: 개, 명, %)

구 분		전체 (A+B+C)	중소기업				대기업 (C)
			소기업(A)		중기업 (B)	소계 (A+B)	
			소상공인				
사업 체수	전산업 (a)	3,125,457 (100.0)	2,748,808 (87.9)	3,022,333 (96.1)	119,999 (3.8)	3,122,332 (99.9)	3,125 (0.1)
	도소매업 (b)	870,599 (100.0)	785,886 (90.3)	840,305 (96.5)	30,004 (3.4)	870,309 (100.0)	290 (0.0)
	소매업 (c)	612,339 (100.0)	576,880 (94.2)	600,751 (98.1)	11,457 (1.9)	612,208 (100.0)	131 (0.0)
	b/a	27.9	28.6	27.8	25.0	27.9	9.3
	c/a	19.6	21.0	19.9	9.5	19.6	4.2
종사 자수	전산업 (d)	14,135,234 (100.0)	5,333,561 (37.7)	8,056,436 (57.0)	4,206,099 (29.8)	12,262,535 (86.8)	1,872,699 (13.2)
	도소매업 (e)	2,577,813 (100.0)	1,432,932 (55.6)	1,778,600 (69.0)	689,458 (26.7)	2,468,058 (95.7)	109,755 (4.3)
	소매업 (f)	1,489,058 (100.0)	997,461 (67.0)	1,147,231 (77.0)	292,512 (19.6)	1,439,743 (96.7)	49,315 (3.3)
	e/d	18.2	26.9	22.1	16.4	20.1	5.9
	f/d	10.5	18.7	14.2	7.0	11.7	2.6

출처: 통계청, 『2010 기준 경제총조사』에서 재편·가공 (중소기업중앙회(2012), 『2012년 중소기업 현황』에서 재인용).
전 산업 대비 도·소매업 및 소매업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비중(b/a, c/a, e/d, f/d)은 자료에 기초하여 계산.

차지하여 전 업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도·소매업의 소상공인 종사자 수 역시 전 산업 소상공인 종사자 수의 26.9%를 차지하여 전 업종 중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낸다. 도·소매업 내에서의 소상공인 비중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도·소매업 사업체 중 90.3%가 소상공인으로 나타나 전 산업 평균(87.9%)을 상회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종사자 비중도 55.6%로 전 산업 평균(37.7%)을 크게 상회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으로 보면, 소매업은 사업체 수에서는 전 업종 중 소상공인 비중이 가장 높으며, 종사자 수에서는 음식점 및 주점업 다음으로 소상공인 비중이 높

다. 전 산업 소상공인 중 소매업의 비중은 사업체 수 21.0%, 종사자 수 18.7%이다. 소매업 내에서의 소상공인 비중은 도·소매업보다 더 높다. 소매업 사업체 중 94.2%, 종사자 중 67.0%가 소상공인이다.

한편 자영업체 통계에서도 소매업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의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에 따르면, 경제 전체 자영업체의 89.0%가 서비스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서비스산업 내에서는 소매업의 자영업체 비중이 23.3%(전 산업 대비 2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표 2〉 서비스산업 업종별 자영업체 비중

(단위: %)

구 분	자영업체 비중	전 산업 대비 자영업체 비중
서비스산업	100.0	89.0
도매 및 소매업	31.1	27.7
소매업	23.3	20.7
운수업	13.1	11.7
숙박 및 음식점업	25.1	22.3
음식점 및 주점업	23.2	20.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3	0.3
금융 및 보험업	0.2	0.2
부동산 및 임대업	3.7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8	1.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7	0.6
교육서비스업	5.4	4.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4	3.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9	3.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1.2	10.0

출처: 통계청, 「2010 기준 경제총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계산.

2. 소매업 소상공인 경영 현황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소매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 비중이 매우 높아 공급과잉 및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 악화 문제가 첨예하게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SSM), 편의점 등 기업형 유통의 확대 등으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소매업에서의 창업은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기대하는 ‘기업가적 창업’보다는 생계유지를 위한 ‘생계형 창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2010년 기준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창업을 하게 된 동기로 생계 해결

이 80.2%로 나타났으며, 성공할 가능성이 보여 창업을 하게 되었다는 응답은 17.2%에 불과하였다.¹⁾ 이 결과는 업종 구분 없이 소상공인 전체를 대상으로 나온 것인데, 소매업의 생계형 창업 비중은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소매업은 자본이나 숙련 등 창업의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업종이어서 특별한 기능이나 숙련이 없고 소규모 자본을 보유한 실직자 및 퇴직자들이 소매업에 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 결과 소매업은 생계형 영세업체의 과당경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이에 더하여 대형 유통기업의 진출 확대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자영업자들의 인식에서도 확인

1) 중소기업청·소상공인진흥원(2010), 「2010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표 3〉 산업별 소상공인 월평균 매출액 분포

(단위: %)

구 분	400만원 이하	401~1,000만원	1,001~2,000만원	2,001~3,000만원	3,001~4,000만원	4,001~5,000만원	5,001만원 이상	평균 (만원)
전 체	58.3	25.4	7.8	3.3	1.3	1.2	2.7	990.0
제조업	46.5	24.0	10.3	5.9	2.4	2.2	8.7	2,119.1
전기/가스/수도/건설업	34.9	26.4	12.8	6.1	3.2	4.4	12.2	2,729.1
소매업	47.4	29.4	11.3	5.3	2.1	2.0	2.6	1,072.5
운수/통신업	92.9	6.5	0.4	0.1	0.1	0.0	0.0	278.0
숙박/음식	46.2	37.0	11.9	3.4	0.7	0.5	0.3	736.0
부동산/임대업	76.3	17.2	2.8	1.5	0.3	0.7	1.2	545.2
교육/서비스업	63.6	28.8	4.3	1.8	0.7	0.6	0.1	547.0
오락/문화/운동	61.5	30.9	5.1	1.1	0.5	0.3	0.6	556.5
수리/개인서비스업	79.2	14.9	4.3	1.0	0.2	0.2	0.3	412.3
정보/기술/사업서비스업	49.4	30.3	9.0	4.7	2.1	1.6	3.0	990.6

출처: 중소기업청·소상공인진흥원(2010), 『2010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되는데, 소매업 자영업자가 가장 주요한 경쟁 상대로 인식하는 업체는 대형마트 및 SSM 등 주변 대형 유통업체(41.3%)이지만, 주변의 다른 자영업자를 주요 경쟁 상대로 응답한 비율도 28.5%나 된다. 이 비율은 인터넷 쇼핑 및 홈쇼핑(11.5%)보다 더 높다.²⁾

〈표 4〉 산업별 소상공인 월평균 순이익 분포

(단위: %)

구 분	적자 및 무수입	1~100만원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400만원	401만원 이상	평균 (만원)
전 체	26.8	30.8	23.4	9.9	3.5	5.6	149.1
제조업	24.5	26.3	19.9	12.4	4.6	12.3	237.0
전기/가스/수도/건설업	24.6	22.1	18.8	13.9	4.0	16.7	288.5
소매업	25.1	32.1	22.6	10.2	4.3	5.7	141.4
운수/통신업	21.8	34.2	41.1	2.5	0.3	0.1	99.9
숙박/음식	24.5	30.2	24.4	11.4	4.8	4.6	141.4
부동산/임대업	42.3	28.6	18.1	5.8	2.1	3.0	90.7
교육/서비스업	25.8	31.2	24.3	11.9	4.5	2.3	130.8
오락/문화/운동	30.3	31.8	23.8	9.4	2.2	2.5	111.9
수리/개인서비스업	27.3	40.1	20.7	8.2	1.9	1.8	105.5
정보/기술/사업서비스업	25.4	27.6	22.7	11.4	4.8	8.0	158.8

출처: 중소기업청·소상공인진흥원(2010), 『2010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 *ibid.*

소매업 소상공인이 처한 어려움은 매출 및 순이익 등 경영 실적에서도 나타난다. 2010년 기준 소매업 분야 월평균 매출은 1,072만원이며, 400만원 이하가 47.4%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1,000만원 이하는 76.8%에 이른다. 이러한 경영 문제는 적자를 경험하고 있는 사업자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등 순이익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매업 분야 소상공인의 월평균 순이익은 141만원에 불과하며, '1~100만원'이 32.1%로 가장 많고 '적자 및 무수입'도 25.1%를 차지한다.

3. 최근 경기침체와 소상공인 영업환경 악화

불황이 찾아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호황기를 맞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기 순환의 현상이었다. 미국의 불황은 일반적으로 16~18

개월 지속되다가 다시 호황기를 맞이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불황은 '블랙스완'으로 전환하여 경기후퇴에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변하였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장기간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것을 말하며 5~10년 지속되는 복합 불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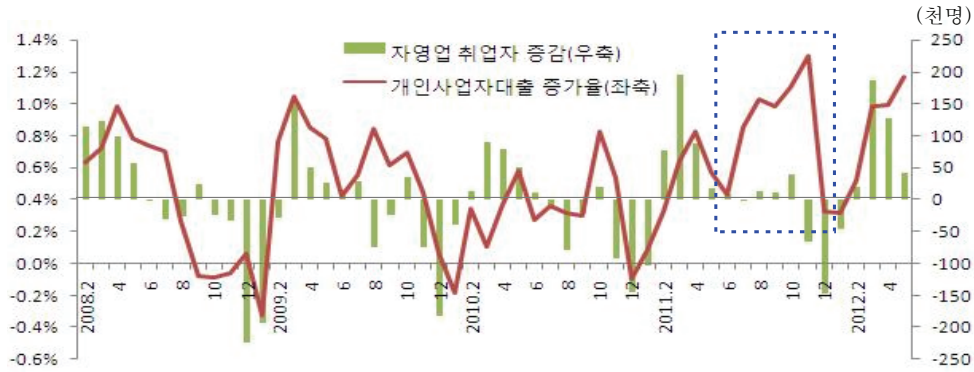
한국의 경우 1970년 이후 지금까지 대형 경기침체와 소형 경기침체 등 총 5차례의 경기 침체가 발생하였다. 제2차 오일쇼크(1979~1980), 부동산 규제 침체(1992년), 외환위기(1997~1998), 신용대란(2003), 금융위기(2008~2009)로 국내 경기불황이 나타났다. 특히 2012년 이후에는 경제 성장률이 3% 이하인 이른바 '서브 3% 저성장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올해 대부분의 경제 전문 연구소에서도 2%대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위: 전년동기비 %)



출처: 한국은행, 국민소득

〈그림 1〉 한국 경제 성장률



출처: 금융위원회(2012), 「가계부채 동향 및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그림 2〉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

이처럼 저성장 경제가 지속됨에 따라 자영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즉, 자영업은 앞에서 지적한 과잉공급 및 과당경쟁으로 인한 낮은 경쟁력 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최근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인한 상황적인 문제까지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자영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부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0년 말부터 2012년 3월까지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16.5조원) 중 부동산·임대업(8.8조원), 도소매·음식숙박업(6.0조원)의 비중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이 업종의 부채 증가 속도도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자는 경기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에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면 부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즉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자영업의 위기 및 그에 따른 구조조정이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으므로, 자영업의 체계적인 유입 및 퇴출 관리가 필요하다.

Ⅲ. 주요 국가들과의 비교

1. OECD

ILO 및 OECD 등 국제기구에서 국가별 동일한 기준에 따른 소상공인 통계나 자영업체 통계는 생산되고 있지 않으며 자영업자 통계만 생산·공표되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 통계를 이용한 국제 비교가 가능하다.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ILO 고용통계에 따르면 2008년 기준 OECD 국가들의 평균 자영업자 비중은 14.4%이고, 남성과 여성 자영업자의 비중은 각각 17.6%와 10.1%로 자영업자의 비중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2008년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5.8%로 그리스(27.4%), 멕시코(27.4%), 터키(26.3%)에 이어 OECD 국가들 가운데 네 번째로 높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 자영업자 비중은 31.1%로 그리스(33.8%), 터키(31.3%)에 이어 OECD 국가들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고, 여

〈표 5〉 산업별 자영업자 비중의 국제 비교(2008년)

(단위: %, %p)

구분	한국	OECD(한국 제외)	차이
전 산업	25.8	15.0	10.8
제조업	11.6	8.1	3.5
전기·가스·수도	1.2	2.4	-1.2
건설업	21.8	24.0	-2.2
도·소매업	37.1	18.8	18.3
숙박·음식점업	32.0	16.4	15.6
운수업	39.0	12.8	26.2
금융·보험업	6.3	8.0	-1.7
부동산·임대업	14.3	21.9	-7.6
교육	19.2	3.2	16.0
건강·사회사업	7.8	7.5	0.3

출처: ILO 고용통계 (주현·김숙경 외(2010), 「자영업 비중의 적정성 분석 및 정책과제 연구」, 소상공인진흥원·산업연구원, p.144에서 재인용).

성 자영업자 비중은 18.5%로 멕시코(25.1%), 포르투갈(19.6%)에 이어 OECD 국가들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다.

또한 자영업자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중은 우리나라가 74.2%로 그리스(72.4%)보다는 높고, 터키(77.6%)와 멕시코(82.0%)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OECD 회원국(한국 제외) 평균보다 높은 산업은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운수업, 교육, 건강·사회사업이고, OECD 회원국(한국 제외) 평균보다 낮은 산업은 전기·가스·수도 사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이다. 산업별로 우리나라와 OECD 회원국(한국 제외)의 자영업자 비중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 산업으로는 10.8%p이며, 운수업(26.2%p), 도·소매업(18.3%p), 교육

(16.0%p), 숙박·음식점업(15.6%p) 등에서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이 높다(〈표 5〉 참조).

이 중에서 운수업 및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이유는 우리나라에 독특한 특수성으로 상당부분 설명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운수업의 경우, 개인사업체 혹은 자영업자의 대부분은 택시운송업(KSIC 49231) 및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KSIC 49312)에 집중되어 있다. 2008년 기준 이 두 업종의 개인사업체가 전체 운수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7.4%에 달한다. 즉, 우리나라 운수업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은 이유는 개인택시 및 개인화물차의 존립을 가능케 하는 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³⁾ 우리나라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개인사업체 혹은 자영업자

3) 주현·김숙경 외(2010), 「자영업 비중의 적정성 분석 및 정책과제 연구」, 소상공인진흥원·산업연구원, p.145.

의 대부분은 일반교습학원(KSIC 8550) 및 예술학원(KSIC 8562)에 집중되어 있다. 2008년 기준 이 두 업종의 개인사업체가 전체 교육서

비스업체의 60.2%를 차지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교육서비스업의 자영업자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은 이유는 국민의 높은 교육열과

〈표 6〉 전 산업 자영업자 비중의 국제 비교(2008년)

(단위: 천명, %)

국가명	취업자	자영업자A	자영업자 B	자영업자	자영업자 비율		
					전체	남	여
Australia	11,019.8	299.1	944.3	1,243.4	11.3	13.6	8.5
Austria	4,252.3	196.8	275.0	471.8	11.1	13.3	8.5
Belgium	4,779.6	188.3	402.2	590.5	12.4	15.8	8.1
Canada	18,245.1	863.8	1,756.6	2,620.4	14.4	17.8	10.5
Czech Republic	5,232.3	179.0	603.6	782.6	15.0	19.4	9.2
Finland	2,726.0			314.0	11.5	15.0	7.7
France	27,983.5	1,180.7	1,384.5	2,565.2	9.2	12.2	5.8
Germany	41,875.0			4,143.0	9.9	12.5	6.8
Greece	4,917.9	372.0	975.4	1,347.4	27.4	33.8	18.2
Hungary	4,208.6	202.7	264.9	467.6	11.1	14.0	7.7
Iceland	177.3	8.7	15.6	24.3	13.7	18.8	7.6
Ireland	2,101.6	122.7	216.6	339.3	16.1	23.6	6.2
Italy	23,404.7	285.0	4,771.2	5,056.2	21.6	26.7	13.9
Japan	63,850.0	1,610.0	4,450.0	6,060.0	9.5	12.3	5.6
Korea	23,432.8	1,562.0	4,487.2	6,049.2	25.8	31.1	18.5
Mexico	43,867.0	2,169.0	9,868.0	12,037.0	27.4	28.8	25.1
Netherlands	8,457.0			1,107.0	13.1	16.1	9.5
New Zealand	2,188.2	110.5	243.3	353.8	16.2	20.5	11.2
Norway	2,524.0	52.0	137.0	189.0	7.5	10.4	4.1
Poland	17,011.0	651.0	2,361.0	3,012.0	17.7	21.1	13.6
Portugal	5,624.9	291.7	925.6	1,217.3	21.6	23.4	19.6
Slovakia	2,700.4	79.5	269.2	348.7	12.9	17.2	7.6
Spain	22,848.2	1,173.0	3,616.2	4,789.1	21.0	25.6	14.8
Sweden	4,593.0			466.0	10.1	14.2	5.6
Switzerland	4,375.4	263.8	329.3	593.1	13.6	16.3	10.4
Turkey	21,194.0	1,251.0	4,324.0	5,575.0	26.3	31.3	12.4
United Kingdom	29,099.9			3,763.1	12.9	17.4	7.7
United States	154,287.0			10,584.0	6.8	8.0	5.3
OECD 평균					14.4	17.6	10.1

주: 자영업자 = 자영업자A + 자영업자B. 자영업자A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자영업자B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의미함.
출처: ILO 고용통계 (주현·김숙경 외(2010), 『자영업 비중의 적정성 분석 및 정책과제 연구』, 소상공인진흥원·산업연구원, p.89에서 재인용).

과도한 사교육 의존도에서 찾을 수 있다.⁴⁾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OECD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의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도·소매업이 이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2. 일본

일본은 유럽 및 미국 등 서방국가에 비해 경제발전 과정 및 문화와 환경 측면에서 한국과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일본의 자영업 현황

및 추이는 우리나라의 자영업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경로를 전망해 보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산업별 자영업자 현황을 보면, 2007년 기준 서비스업⁵⁾이 전체 자영업자의 25.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도·소매업(17.1%), 건설업(16.1%), 제조업(10.8%), 숙박·음식점업(9.3%)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2년과 비교하면 제조업, 금융·보험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자영업자가 감소한 반면, 부동산업과 서비스업에서는 증가하였다.

〈표 7〉 일본의 산업별 자영업자 수

(단위: 천명, %)

구분	2002년	(구성비)	2007년	(구성비)	증감	(증감률)
전 산업	5,624	(100.0)	5,406	(100.0)	-218	(-3.9)
제조업	744	(13.2)	584	(10.8)	-160	(-21.5)
건설업	871	(15.5)	868	(16.1)	-3	(-0.3)
전기·가스·수도업	-	-	-	-	-	-
정보통신업	50	(0.9)	78	(1.4)	28	(56.0)
운수업	173	(3.1)	156	(2.9)	-17	(-9.8)
도·소매업	1,061	(18.9)	923	(17.1)	-138	(-13.0)
금융·보험업	64	(1.1)	53	(1.0)	-11	(-17.2)
부동산업	182	(3.2)	215	(4.0)	33	(18.1)
숙박·음식점업	570	(10.1)	501	(9.3)	-69	(-12.1)
의료·복지	228	(4.1)	236	(4.4)	8	(3.5)
교육	290	(0.02)	283	(5.2)	-7	(-2.4)
서비스업	1,359	(24.2)	1,377	(25.5)	18	(1.3)
기타	32	(0.6)	132	(2.4)	100	(312.5)

주: 여기서 전산업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공무를 제외한 전 산업임.

출처: 日本 總務省 統計局, 就業構造 基本調査.

4) *ibid.*

5) 일본표준산업분류(JSIC)에서 '서비스업'은 우리나라 산업분류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업서비스',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 '개인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표 8〉 일본의 산업별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

(단위: %)

구분	2002년	2007년
전 산업	10.8	10.1
제조업	6.1	5.0
건설업	14.3	15.9
정보통신업	2.8	3.5
운수업	5.2	4.8
도·소매업	9.1	8.1
금융·보험업	3.6	3.1
부동산업	19.9	20.5
숙박·음식점업	15.7	14.4
의료·복지	4.7	4.0
교육	10.3	9.5
서비스업	16.1	15.9

주: 여기서 전산업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공무를 제외한 전 산업임
출처: 日本 總務省 統計局, 就業構造 基本調査.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을 산업별로 살펴 보면, 2007년 현재 부동산업이 20.5%로 가장 많고 건설업(15.9%), 서비스업(15.9%), 숙박·음식점업(14.4%)의 순으로 나타난다. 2002년과 비교하면 자영업자 비중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건설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에서는 증가한 반면,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을 비롯한 나머지 업종에서는 감소하였다.

2007년 기준 우리나라 도·소매업의 자영업자 비율이 37.1%, 숙박·음식점업의 자영

업자 비율이 32.0%인 것에 비해 일본의 경우도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의 자영업자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더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소매업의 영세업체 현황을 보면,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 소매업의 산업구조가 상당히 영세한 편임을 알 수 있다. 2007년 기준 소매업에서 일본은 종사자 4명 이하 사업체 비중이 68.2%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09년 93.3%로, 우리나라가 25.1%포인트나 더 높다.

〈표 9〉 한·일 소매업의 규모별 사업체 수 비중

(단위: %)

구분	1~4명	5~9명	10~19명	20명이상	20~49명	50명이상
한국 (2009년)	93.3	4.7	1.2	0.8	0.6	0.2
일본 (2007년)	68.2	19.9	8.1	3.8	2.9	0.9

출처: 통계청, 「도소매업조사보고서 2009」; 日本 經濟産業省 홈페이지, 2007年 商業統計表.

IV. 정책적 시사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소매업의 주요한 문제는 생계형 자영업의 공급과잉으로 인해 상당수 업체가 경영 악화에 직면하여 비자발적 퇴출 상태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향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으로의 유입 및 퇴출 관리를 통해 공급과잉 상태를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자영업이 우리나라 취업자의 30% 정도에 해당하는 고용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영업이 실업문제를 완화시키는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자영업자를 임금근로자로 흡수할 충분한 노동수요처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인위적인 급속한 자영업의 진입 제한 및 퇴출은 실업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의 비중을 인위적으로 하락시키는 정책은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자영업 정책은 인위적인 급속한 변화를 피하기 보다는 사회의 적응능력을 고려한 자연스러운 변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1.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퇴직지원 프로그램 강화

2010년 기준 베이비붐머는 69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5%를 차지하며, 베이비붐머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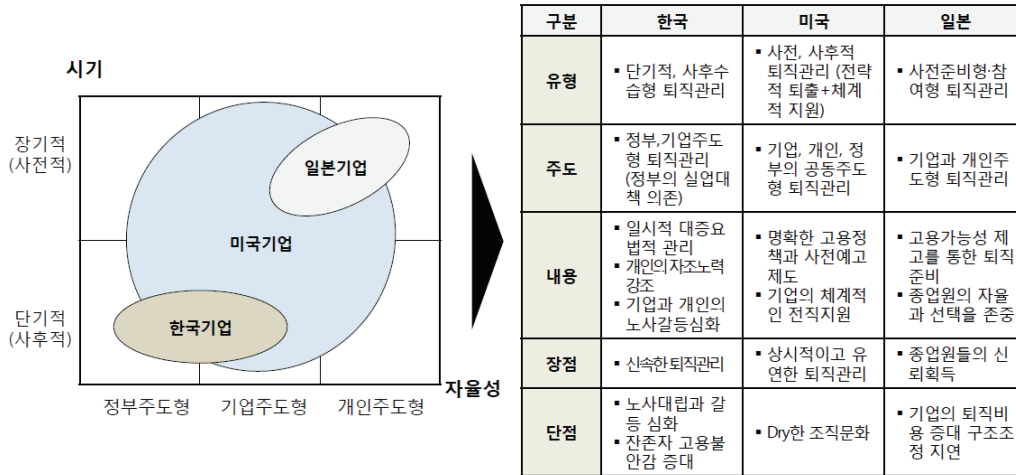
영업자는 163만명으로 베이비붐머 종사자 중 32.7%를 차지하고 있다. 소상공인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2010년 장년층 중에서 46.3%가 창업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며 퇴직예정자가 퇴직자보다 창업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⁶⁾ 이렇듯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재취업이 힘든 많은 장년층이 자영업체로 전환하여 창업을 하고 있다. 기업의 경우 연공서열제로 인한 인건비 부담 등으로 시니어 고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니어들은 퇴직 후 자의반 타의반으로 재취업보다는 창업을 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

현재 청년 실업 문제에 묻혀 시니어 취업은 크게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시니어 창업지원 정책이 대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시니어 창업스쿨’은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지원하여 전국 30여개의 기관에서 교육을 제공하는 창업교육프로그램으로 실질적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시니어 비즈플라자’는 시니어 창업 준비를 위한 공간으로 전국 11개 시니어 비즈플라자에서 상담, 교육, 세미나, 특강, 사무 공간 등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온라인 서비스 ‘시니어넷’은 시니어 창·취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창·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소상공인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생계형 자영업 분야의 창업보다 기술·지식형 서비스 분야로의 창업이 확대되는 등 일정한 성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⁷⁾

그러나 현재 자영업의 공급 과잉 상황 및

6) 소상공인진흥원(2010), 「2010년 시니어 실태조사」.

7) 소상공인진흥원(2012),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급증에 따른 현황과 개선과제」.



출처: 태원유 외(2001), 『퇴직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삼성경제연구소.

〈그림 3〉 퇴직관리 국제비교

향후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규모를 고려할 때 자영업으로의 유입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경우 이미 정년퇴직 제도를 철폐하거나 정년퇴직연령을 연장하고 있으며, 퇴직 준비 프로그램을 통해 퇴직자에게 노후 설계와 재취업, 창업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1980년대 초 전직지원 컨설팅협회를 시작으로 1994년 이미 300개 이상의 전직지원 컨설팅사가 설립되었으며, 그 시장규모가 10억달러로 성장하였다. 일본 또한 퇴직지원 프로그램 시장 매출규모가 2003년 303억 엔을 달성하였고, 유럽은 2000년 유럽 퇴직지원 프로그램 기금을 조성하였는데, EU 협상을 통해 320억 유로의 기금을 조성하였다. 선진국들은 정부, 기업, 또는 노사정 협력에 의한 퇴직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해고자나 퇴직자에게 교육기간 동안 교육비 지급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임금의 일부를 지불하기도 한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는 퇴직관리체도가 정부 중심의 퇴직지원 프로그램에 치중되어 있고, 또 사전·사후관리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베이비붐 세대 퇴직지원 프로그램과 창업교육 프로그램 품질의 개선과 보다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사후 수습형이 아닌 퇴직 6개월~1년 전부터 사전적으로 퇴직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준비시간을 갖도록 하고, 퇴직자의 DB를 구축하여 사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실행중인 유망 사업 아이템(기술·지식 서비스 사업과 실버, 1~2인 세대, 웰빙, 친환경 등과 같은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신사업) 발굴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여 생계형 창업의 진입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창업 교육 프로그램 중 성공한 시니어 창업자와 실패한 시니어 창업자의 교육 특강을 신설하여 생생한 체험 위주로 교육을

해야 하며, 창업멘토링제도를 통해 성공한 창업 멘토와 멘티 베이비부머 창업자간의 모델팀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창업 숙려를 촉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성급한 창업을 막고 실패율을 낮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비창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들에 따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예비창업자가 창업시 사업의 성공 및 실패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시나리오 1 (Plan A)
: 향후 2년간의 이상적인 현금 수지
- 시나리오 2 (Plan B)
: 향후 2년간 경제 전망과 현실성을 고려한 현금 수지
- 시나리오 3 (Plan C)
: 향후 2년내 사업실패에 따른 출구 계획 (폐업 전략)

한편 우리나라는 소수의 대기업에서만 퇴직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 자체 프로그램보다는 공공기관이나 타 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소상공인진흥원의 퇴직지원 프로그램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창업 및 경영교육에 참여했다는 퇴직예정자가 44.4%로 가장 많았고 타 기관의 교육 경험은 없다는 응답자가 63.2%로 여전히 창업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공공기관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⁸⁾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선진국의 경우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에

서도 자체 퇴직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일본의 경우 회사주도형이 75%) 퇴직예비자들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기업들이 퇴직지원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퇴출의 용이성 제고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평균 생존기간은 3.4년이며 생존비율은 24.6%로 조사되었다. 2002년 이후 연간 평균적으로 개인사업자 72만개가 창업하고 퇴출되는 상황이다. 업종별로는 주점 및 유흥 서비스업이 기간별 휴·폐업이 가장 높으며 정보통신 판매, 음식점, 잡화점, 스포츠·오락, 전자제품 판매 등이 평균 이상의 높은 휴·폐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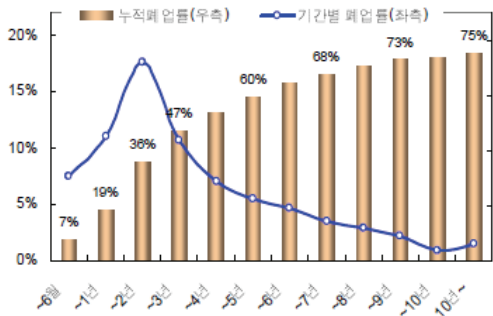
학원 및 교육 서비스와 소매업의 경우 생존기간이 3년 이내이며 이미용, 주점 및 유흥 서비스, 음식점, 개인 서비스업 등의 생존기간은 평균 이하 수준이다. 반면, 전문성을 요하고 창업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숙박업, 운수업, 병원 및 의료 서비스업, 전자제품 판매업 등은 생존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가 사업에서 실패한 가능성이 높은 것은 짧은 준비기간, 자금부족,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으로의 쏠림현상, 잘못된 입지 선정, 부채 및 높은 임대료, 경영노하우 부족 등에 주요하게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다수의 자영업자가 사업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고통을 최소화하여 원활하게 폐업할 수 있도록 퇴출의 용이

8) 소상공인진흥원(2010) 「국내기업, 공공기관 퇴직지원 프로그램 실태조사」.

[개인사업자 창업후 기간별 휴·폐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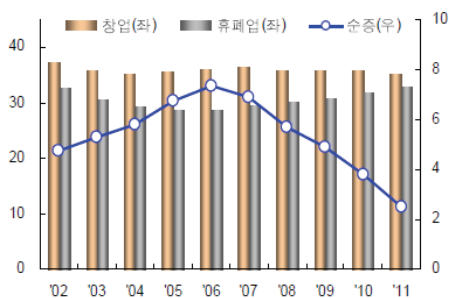
[개인사업자 업종/기간별 휴·폐업률]

	1년미만	3년미만	총폐업률
주점·유흥서비스	26.4	62.0	88.7
정보통신	23.4	56.1	84.7
음식점업	20.2	52.2	81.7
의류·잡화점	22.2	53.6	79.1
스포츠·오락	18.0	46.0	78.5
전자제품	16.8	44.8	75.7
학원·교육서비스	11.4	36.6	75.3
숙박업	16.4	41.6	73.0
합계	18.5	46.9	7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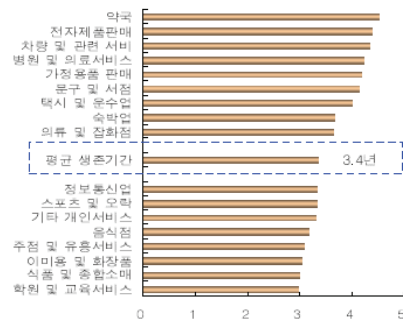
출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2), 「개인사업자 창·폐업 특성 및 현황분석」.

〈그림 4〉 자영업자 휴·폐업률

[자영업자 창업 및 휴·폐업 추이]



[개인사업자 업종별 생존기간]



출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2), 「개인사업자 창·폐업 특성 및 현황분석」.

〈그림 5〉 자영업자 휴·폐업 추이 및 생존기간

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우선, 창업은 폐업을 전제로 하므로 창업 컨설팅이나 소상공인 지원기관들을 통해 창업에 필요한 교육뿐만 아니라 퇴출 대비 사전 교육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폐업 자영업자가 재창업이나 구직활동 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

요가 있다.

현재 정부의 자금지원이 일부 있지만, 이러한 정부 지원정책을 모르는 자영업자가 많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원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다만, 개별 자영업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자금지원은 구조조정을 인위적으로 지연시켜 자영업의 공급과잉 상황을 해소하는 데 도움

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정책 자금지원에 대한 실효성과 타당성에 검토는 선행될 필요가 있다.

3. 정책 자금의 흐름 재구성

공공 정책은 조직의 변화를 장려하거나 비즈니스 모델과 같은 중요한 전략의 재점검을 합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는 문화적 변화 전략이라고도 불린다. 많은 조직들은 변화를 주저하는 것이 생리이다. 따라서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외부의 간섭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또한 정부는 필요한 경우 기업이 기존의 사업 방법을 재구성하여 혁신적이며 전략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기법이나 방법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비즈니스 모델과 제품, 서비스 혁신에서 획기적인 방법을 지원해 주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정부는 현재 개별 기업 중심의 경계선을 타파하고, 개별 기업이 다른 기업, 대학교, 혹은 정부 등 공공기관과 함께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과 관련지어 보면, 정부의 정책 자금은 기존 사업체에 집중되기보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혁신적 창업에 투입될 필요가 있다.

논문접수일 : 2012. 10. 16

게재확정일 : 2012. 12. 05

참고문헌

- 고가영·이근태 (2012), 「저부가가치에 몰리는 창업. 자영업 경기 더 악화시킨다」, LG경제연구원.
- 금융위원회 (2012), 「가계부채 동향 및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
- 서용구·한경동 (2009), 「한국 소매시장 포화와 시사점」, KCCI 유통물류진흥원.
- 소상공인진흥원 (2010), 「국내기업, 공공기관 퇴직지원 프로그램 실태조사」.
- 소상공인진흥원 (2011), 「2011년 소상공인 통계집」.
- 소상공인진흥원 (2012), 「2012년 7, 8월 소상공인 경기동향(BSD)」.
- 소상공인진흥원 (2012),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급증에 따른 현황과 개선과제」.
- 이재형 (2012), “영세사업자의 실태”, KDI FOCUS, 한국개발연구원.
- 이재형·양정삼 (2011), 「영세사업자 실태분석」, 한국개발연구원.
- 주현·김숙경 외 (2010), 「자영업 비중의 적정성 분석 및 정책과제 연구」, 소상공인진흥원·산업연구원.
- 중소기업중앙회 (2012), 「2012년 중소기업 현황」.
- 중소기업청·소상공인진흥원 (2010), 「2010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2), 「개인사업자 창·폐업 특성 및 현황분석」.
- 통계청 (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 (각 호), 「도소매업조사보고서」.
- 통계청 (2012), 「2010년 경제총조사」.
- 통계청 (2012), 「2012년 8월 소비자 물가 동향」.

- 통계청 (2012), 「2012년 9월 고용동향」.
- 태원유 외 (2001), 「퇴직관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삼성경제연구소.
- 한국은행 (2012), 국민소득.
- 日本 總務省 統計局, 就業構造 基本調査.
- 日本 經濟産業省, 2007年 商業統計表.
- Tony Hillier (1999), “Successful Competitive Strategies for Recession & Recovery”.
- John Kitching, Robert Blackburn, David Smallbone and Sarah Dixon (2009), “Business Strategies and Performance During Difficult Economic Conditions”, Department of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BIS).

Policy Study on Korean Retail Micro Business

Yong Gu Suh*
Suk Kyung Kim**

Abstract

The unabated influx of micro businesses has turned the Korean retailing market to a rat race, which causes severe financial distress for micro business owners due to heavy competition. The woes of these micro business owner's are exacerbated by the presence of large scale distributors such as Super Supermarket(SSM) and large discount stores. In summary, the Korean retail market is overburdened and uneconomically viable.

Retailing has low barriers to entry which attracts unskilled labor or those with little capital. These start-ups have low opportunity costs since they would make low wages elsewhere in the economy. Thus, these owners are content with relatively low returns on their investment. These 'subsistence ventures' are maintained for economical viability rather than economic growth. These 'subsistence ventures' intensifies competition among small-scale businesses. The presence of large retail corporations also aggravates the situation.

The recent stagnation of the economy has worsened the retail market in Korea. The overwhelming competition solidifies the coarse structural system and the prolonged economic sluggishness has increased the risk of insolvency for micro business owners. As the economy continues to stagnate, the imminent risk in retailing market will rise up to surface threatening economic stability. More systematic inflows and outflows of retailers are required in order to redress this structural problem.

It has been empirically shown that the self-employment rate is high in Korea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To draw the comparison of self-employment rate by industry, Korea shows high rates among transportation, whole sale, retail, education, lodging, and restaurants.

* Professor of Marketing, Dept. of Business of Administration, Sookmyung University(ygs9964@sm.ac.kr)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skkim@kiet.re.kr)

In the case of the transportation and education service sectors, this high rate can be explained by the idiosyncratic nature of Korean culture.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political policies favor private cap service and private freight carriers. In the education service sector, Koreans put particular emphasis on education that leads to many private institutions that outnumber other OECD countries. For these singular reasons, Korea maintains high micro business, self-employed rates particularly in retailing.

A comparable nation is Japan, with its similar social, economic, cultural environment among OECD countries. Unlike Korea, Japan has much lower rates of micro business which continues to decrease. Also Korean retailers are much more destitute than Japanese.

The fundamental problem of Korean retailing is the involuntary exit of these 'subsistence ventures,' micro businesses with low margins, in which a small drop in demand can lead to financial difficulties for the owner. This problem will be exacerbated when Korean babyboomers retire and join the micro business ventures. The first priority in order to cope with the severity of oversupply in retailing is to provide better opportunities for the potential self-employers. There should be viable alternatives to subsistent ventures. Strengthening the retirement program, scrutiny of exit process, reconfiguration of policy funds are the recommendations.

Key Words : micro businesses, self-employers, oversupply in retailing, subsistence ventures, retirement program